

	<h1>보도자료</h1>	2021. 11. 27 (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문의) 정책본부 박상현 팀장 010-9240-2545		

## 이재명 후보자, ‘간병 살인 비극’ 강도영씨 변호인에게 편지 보내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

- 이재명 후보, 강도영씨에게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전국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확대 적용 등 약속
- “이재명 정부는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간병 살인 비극’의 주인공 강도영씨의 변호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일 탐사보도 전문매체 <설록>의 보도를 통해 거동 못하는 아버지를 1년 넘게 홀로 간병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존속살해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된 강도영씨 사연이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는 7일 SNS에 <소리 없는 사람들의 서러운 삶과도 함께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강도영씨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법원은 2심에서도 징역 4년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강도영씨 변호인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며 의료 복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첨부1 : 강도영씨 변호인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2 : 강도영씨 사건 관련 제도개선안 자료>

## [첨부1] 강도영씨 변호인에게 보낸 메시지

강도영씨 변호인님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강도영씨께 직접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 끝에 변호인님께 연락드립니다.

2주 전쯤, <설록> 기사를 통해 강도영씨 사건을 처음 접하고 무겁고 복잡한 마음에 SNS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길 바랐건만 징역 4년 원심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도영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피려야 하기에 강도영씨께 제 마음을 담아 약속드립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간병비를 포함하고 정부 기준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만여개에 불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의 확대와 서비스 대상도 중증 환자까지 늘리는 방안, 그리고 일부 지역에만 시범 적용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집에서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 등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계속 찾고 또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을 사기 위해 2만 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 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도영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강도영씨께 이 편지와 저의 진심이 꼭 전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2] 강도영씨 사건 관련 제도개선안 자료

### Ⅰ 사건현황 및 기존제도

#### □ 사건현황

-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아버지 응급수술, 입원 치료비 등으로 병원비가 약 2천만원이나 발생. 아픈 아버지는 굶어 죽었고, 경제력 없는 22세 아들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 □ 기존제도 및 한계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 약 2천만원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신청 못해 혜택 無
  - \*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3천만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 본인부담액의 50%~80%까지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80%). <간병비 미포함>
-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 최대 300만원, 입원 및 수술 후 요양, 재활, 치료연장 등 포괄, 사후 정산 아닌 지자체->해당 병원 지원(퇴원전)
  - \*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지원은 최대 500만원, 금액 범위내 **간병비도 300만원까지 가능**
- **진료비 상한제** : 건보의 <급여> 항목에 대해 제공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1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요양간병인원수가 1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위 기준에 따라 1분위 소득자의 경우 연간 81만원 초과하는 모든 <건보급여>항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환급

- **공적 간병제도 및 돌봄서비스 부재** : 공적 간병지원제도 사실상 전무.
  -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1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었으나 현재 62,018병상(9월기준)에 불과. 대부분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
  - \* 제도상 제한되지 않으나, 간호인력당 환자수<1명: 5~16명>가 많아 현실적으로 중증환자 케어에 어려움
  -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사업(16개지역) 운영 중.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 **무엇보다 중요한 것!** : 부족하나마 여러 지원 제도들 있지만, 강도영씨 아버지의 경우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신청조차 하지 못한 점

## ② 더 나은 의료비지원체계 구축

### □ 제도 개선과제

- **제대로 안내부터!** : 의학적으로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데 퇴원을 원할 경우, 각종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제도 설명 및 이용 권유 의무화  
\* 병원 사회사업실,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 방문 상담, 설명·권유시에도 거부시 지자체 신고
- **긴급복지 의료비 강화** : 현재 경기도 사례처럼 <긴급복지 의료비>에 간병비도 포함하고, 금액을 상향하여 정부 차원에서 시행  
\* 예 : 전체 의료비 1천만원, 간병비 5백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지원제도>는 금액도 500만원으로 크며, 정부 공통 긴급복지와 달리 **간병비(300만원) 포함**

- **재난적 의료비 확대** : 비급여 항목 지원 중심인 <재난적 의료비>의  
①전체 금액 상향(3천만원→5천만원), ②<신청간소화>, ③<간병비> 포함 시행 ④모든 국민에게 본인부담 지원율을 80%까지 상향(현재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만 80%까지 지원)
- **진료비 상한제 先지급** : <급여>를 책임지는 **진료비상한제**, 퇴원전 사전 정산 최대한 가능하도록 개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도 점진적 확대 적용 검토
- **공적 간병제도 구축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시 병상 대폭 확대, 중증 대상 서비스 확대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확대,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검토)**  
① 현재 시행 중인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기존 복지수급자 외 모든 국민에게 조기 적용  
② 이를 현장에서 확인할 가능한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어나는 위기가구 만큼 확충→도움 필요한 이웃에게 복지서비스 제때 지원